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10년도 제3차 회의

1. 일 자 2010년 1월 2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허 경 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송 창 현 부총재보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전 한 백 금융결제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4호 — 「2010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1) 담당 부총재보는 정부가 국회에서 2010년도 기채한도 의결을 받아 당행 앞으로 2010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오에 따라 2010년중 당행이 정부에 대하여 신규로 대출할 금액의 최고한도와 상환기한, 이율 및 기타 조건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0년도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와 대출조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0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2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의안 제5호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하여 당행과의 예금거래를 허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2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의안 제6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신한은금융망과 자금중개회사와의 서버간 직접접속시스템 가동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업무 취급 근거와 시스템 연계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2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 〈정부측 열석자 발언〉

한편 의장은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오늘 아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바 동 회의자료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함

우선 최근의 고용상황이 통계적으로는 외환위기 때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성과 청년층 그리고 일용직 및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고용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단시간근로자중 추가취업희망자 등 전체 취업애로계층 182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였음

정부는 고용회복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25만명 플러스 알파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의 구인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연계, 3.5조원의 벤처펀드 조성,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고졸 미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인턴제 도입, 고용 확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임금 및 근로형태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임

아울러 정부는 전일 발표한 물가종합대책에서 밝혔듯이 설 성수품 등 24가지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임